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문화정책 이슈페이퍼

| | |
|------------|--|
| column 칼럼 | 문화예술교육의 공공성 이지훈 / 필로아트랩 대표 |
| issue 이슈 1 |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과 정책 변화의 방향 송교성 / 문화예술 플랜비 대표 |
| issue 이슈 2 | 부산 문화예술교육 남영희 / 부산대학교 국어교육과 강사 |
| issue 이슈 3 | 플뿌리 문화예술교육으로 전환 고윤정 / 영도문화도시센터 센터장 |
| 문화+교육 | 문화 예술과 교육 이육상 / 오픈스페이스배 교육팀장 |
| 세계는 지금 | 문화예술교육 해외 동향 이동현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의제정책센터 선임전문관 |
| 정책보고서 훑어보기 | 골목문화를 되살리는 민간 문화공간 활성화를 기대하며 최시내 / 가야트라 대표 |
| 문화정책 뉴스클리핑 | 2023. 04. ~ 06. |

문화정책 이슈페이퍼

21호 | 2023. 04. ~ 06.

이번 21호에서는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의 방향'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문화예술교육, 중앙 정부 문화예술교육 계획, 부산과 기초 단위 지역 문화예술교육 등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column 칼럼

03 문화예술교육의 공공성

이지훈 / 필로아트랩 대표

issue 이슈 1

06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과 정책 변화의 방향

송교성 / 문화예술 플랜비 대표

issue 이슈 2

09 부산 문화예술교육

남영희 / 부산대학교 국어교육과 강사

issue 이슈 3

13 풀뿌리 문화예술교육으로 전환

고운정 / 영도문화도시센터 센터장

문화+교육

16 문화 예술과 교육

이옥상 / 오픈스페이스배 교육팀장

세계는 지금

20 문화예술교육 해외 동향

이동현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의제정책센터 선임전문관

정책보고서 훑어보기

23 골목문화를 되살리는 민간 문화공간 활성화를 기대하며

최시내 / 가야트라 대표

문화정책 뉴스클리핑

27 2023. 04. ~ 06.



문화예술교육의 공공성

이지훈
필로아트랩 대표

올해 1월 중앙정부와 부산시는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23-2027)」을 확정, 발표했다. 지난 2018년 1월 ‘제1차 계획’이 나온 뒤 5년 만에 나온 것이다. 이 5년 동안 우리는 많은 일을 겪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 재난’을 들 수 있다. 국내의 경우 ‘우울 위험군’이 늘어나고, ‘자살생각률’도 높아졌다. 말하자면 시민들의 우울감이 커지고, 정신건강이 나빠졌다는 말이다. 또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부작용으로 ‘사회적 고립감’이 깊어지고, ‘대인 신뢰도’가 떨어졌다. 독일 사회학자 ‘니콜라스 루만’의 말처럼 신뢰(Trust)는 사회를 떠받치는 바탕이고 중심이다. 이때 ‘대인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말은 곧 사회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의미다.

이 점에서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심리적 역할이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 또는 「공공성」을 생각하는 첫째 이유는 여기에 있을 듯하다. 말하자면 문화예술의 의미가 이처럼 개인 차원에서 사회 차원으로 확장되었으니 문화예술교육의 패러다임도 변해야 하고, 그 방향성은 무엇보다도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 또는 공공성과 연결된다는 말이다.

문화예술교육의 공공성

이 같은 개념은 중앙정부와 부산시가 발표한 ‘제2차 계획’에도 포함되어 있고, 또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현대사회가 문화예술교육에 주목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오늘날 문화예술교육이 그 자체로 「사회성을 익히는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를 예로 들어보자. 모든 학교가 ‘집단 따돌림’이 없는 학교를 지향한다. 그런데 이 목표를 위한 계획을 물으면 과거에는 ‘모두 사이 좋게 지내도록’ ‘한마음이 되도록’ ‘인성 교육에 힘써 정서가 메마르지 않도록’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도록’...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오늘날 현실은 다르다. 어떤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라는 말을 ‘압력’으로 느낀다. 또 어떤 아이는 자신의 사교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자책’하며 열등감, 패배감을 느낀다. 그런 한편 확실한 이유도 없이 ‘이 아이와는 절대 어울릴 수 없어’ 하는 아이도 있다.

문화예술교육은 이때 ‘부드러운 매개’가 될 수 있다. 「참여, 포용성, 접근성」을 지닌 문화예술교육은 거기에 참여하고, 함께 체험·향유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인이 되기 위한 기초 능력을 기르는 곳」이 될 수 있다. 지극히 개인적인 ‘감각·체험의 질’(=퀄리아, qualia)을 친구와 공유할 때 ‘공통 감각’이 빚어지고, 이것이 적어도 마이크로(micro) 수준에서 공동체의 기반이 된다. 이때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프랑수아 마타라스의 말처럼, 새로운 친구를 얻는 사회적 교류와 공동체 (재)구성의 발판이 되는 것이다.¹

바로 이 점에서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 또는 공공성을 생각할 수 있다. 또 사회문화예술교육과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이분법적 경계를 넘어, 그야말로 ‘종합계획’을 세우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고 본다.

지역 거버넌스 구축

그런 한편 문화예술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하려면 「지역 역량 강화」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2020년 부산 북구에서 ‘꿈꾸는 예술터’ 건립이 무산된 사건은 부산 차원의 문제와 과제를 드러낸 사례다. 정말 소통이 문제였다면, ‘문제해결’의 지역 거버넌스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말하자면 문화예술교육 정책 협력체계가 없었다는 의미다.

이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자.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하려면, 다시 말해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문화예술교육을 실현하려면, 단지 중앙정부에서 나눠주는 예산만 바라보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지역 스스로 지역에 중요한 의제, 즉 지역 주민 상당수가 동의할 만한 의제를 찾아내고, 전용 시설을 마련하며, 좋은 프로그램과 인력을 발굴, 육성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아직 갈 길이 멀다. 교육청과 학부모를 포함한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나 문화예술교육은 개인의 취미나 여가 활동을 위한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남아 있다. 기초 단위 생활문화센터에도 이처럼 개인 차원(감정 회복, 자기 계발)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의 비중이 여전히 대다수를 차지한다. 지역 문화예술교육에서 공공성이라는 가치를 확산하는 방법론이 필요한 이유다.

이 관점에서 부산시 ‘제2차 계획’은 ‘문화예술교육 종합아카데미’를 제안하고, 또 “오랜 경험이 있는 마을활동가 혹은 마을 교사를 일정한 교육과정을 통해 문화예술교육강사로 인정해주는 주민활동가 문화예술교육강사 양성” 과정을 제안한다. 지역 공동체 감각의 회복이란 면에서 바람직하다. 다만 여기에는 넓은 의미에서 지역 정치의 협력이 필요하다. 문화정책 결정 구조의 협력체계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또 인턴십에 관해 부산시 ‘제2차 계획’은 “고등학생·대학생·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후속 세대 문화예술교육사 양성 인턴십 및 서포터즈 제도”를 덧붙였는데, 이 제도의 의미를 좀 더 강조하면 좋을 듯하다. ‘사회적경제’와 창업지원으로 발전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1 Matarasso, F.,(1997), Use or Ornament? The Social Impact of Participation in the Arts, Stroud: Comedia.

그리고 부산시 '제2차 계획'은 '홍보 다각화' 추진과제에서 지역 문화예술교육 자원(인력, 공간) 데이터 축적, 아카이빙과 온라인 플랫폼 연계를 제안한다. 물론 아카이빙의 실효성이 의심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아카이빙은 지역 공동체가 과거의 좋은 기획, 프로그램을 되새기고, 스스로 새 의제를 발굴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면에서 잘 살릴 필요가 있다. 아카이빙의 온라인 연계와 함께 오프라인 연계를 생각해보면 어떨까 한다. 자료 보관뿐 아니라 자료의 상설 전시, 기획 전시도 진행하는 물리적 공간을 말한다. '광역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공간' 구성과 함께 고민해도 좋을 것 같다.

생활권 문화공간

끝으로 부산시 '제2차 계획'은 '문화예술교육의 가치 및 공감대 확산' 추진과제에서 사회적 의제와 연계를 두드러지게 강조한다. 중앙정부와 지역자치단체를 통틀어 기존의 계획은 주로 '행정·기관 통합' 프로그램의 관점에서 접근했다. 하지만 이번 부산시 계획은 사회적 의제를 중심으로 통합과 확산을 계획한다. 앞서 말한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 또는 공공성 개념과 이어지는 것이다. 참신하고 혁신적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사회적 의제에 맞춰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구성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다. 학교도, 사회도 사회적 의제에 관해서는 '동질적 공동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어떤 것이 '좋다 / 나쁘다' '아름답다 / 추하다'에 관한 공통 감각이 희박해졌다. 또 사회적 의제의 성격에 따라 '공식 문화기반시설'이 다루기 어려운 주제도 있을 것 같다.

이 점에서 '비공식 문화기반시설' (informal cultural infrastructure)과 연계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부산지역 '비공식 문화기반시설'로는 '생활권 문화공간'을 들 수 있다. 생활권 문화공간은 참여도, 포용성, 접근성을 고루 갖췄다. 미국 사회학자 '레이 올튼버그'의 말처럼 '학교, 가정, 직장'을 보완하는 '제3의 공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부산지역에는 동네 서점, 작은 갤러리 또는 복합문화공간, 소공연장, 소극장 같은 소규모 '민간 문화공간', 곧 '비공식 문화공간'이 상대적으로 풍부하다. 2020년 1월 기준, 총 82개의 공연장, 갤러리 127개, 서점 202개가 있다. 공연장의 경우 공공 운영 공연장은 39개이고, 민간 운영 공연장은 43개이다. 공연장 과반수가 민간 '비공식 공간'인 셈이다.² 이처럼 여러 영역과 세대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 과정이 곧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통합과 확산의 과정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2 부산문화재단, 『2020 부산광역시 문화지표조사』, 73~123쪽, 특히 공연장 항목은 91쪽.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과 정책 변화의 방향

송교성

문화예술 플랜비 대표



지난 2월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5년간의 문화예술교육 정책 방향을 담은 「K-컬처, 문화예술교육으로 날다 -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제1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이행현황 분석, 종합계획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라운드테이블과 설문조사 등 문화예술교육 현장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연구를 시행했고,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최종 발표되었다.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제도적 접근은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화되었는데, 당시 공급과 매개 부문에 한정되어 있던 문화정책을 수요부문까지 확장하기 위함이었다. 개념적으로는 기존의 전통적인 예술 장르 중심의 교육과 함께,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 창조하는 문화교육 개념을 통합하며 형성되었다.¹ 특히 예술인들의 사회진출과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된 예술강사제도가 주요한 정책 사업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그동안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종합계획', '중장기 전략', '중장기 발전계획' 등을 거치며 정책이 형성되어왔는데, 2015년 법 개정으로 종합계획 수립 법적 의무화가 이루어지면서 <제1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2018~2022>(이하 1차 종합계획)이 입안, 실행되었다. 1차 종합계획은 「삶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문화예술교육의 재도약」을 비전과 목표로 지역 기반 생태계 구축, 수요자 중심 교육 다각화, 문화예술교육 기반 고도화를 전략으로 추진되었다.

1차 종합계획 종료에 따라, 2023년 제시된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이하 2차 종합계획)에서는 1차 종합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다음과 같이 짚고 있다. 우선 취약계층을 비롯하여 시민의 보편적 문화향유 기회가 확대되었으며, 생애주기별 교육 등 프로그램이 다각화되었다. 또한, 지역화 실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연수 콘텐츠 개발 및 실행 등이 이루어졌다. 한계로는 일반 국민의

1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06 문화예술교육 정책백서』, 참고.

인지도와 체감도가 여전히 미흡하고, 중앙 중심의 정책으로 인한 정책효과 확산 한계, 지역 자원 및 전문 인력에 대한 관리체계 미비, 타 영역과의 연계 부족 등이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2차 종합계획은 「누구나, 더 가까이, 더 깊게 누리는 문화예술교육」을 비전으로 ‘자유, 공정, 연대, 체감, 환류’를 5대 추진 방향으로 설정하고, ‘차별 없이 자유롭게 누리는 문화예술교육’, ‘공정한 문화예술교육 접근 기회 보장’, ‘짜임새 있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였다. 세부 추진전략은 3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 누구나 : 일상에서 참여하는 문화예술교육

이 전략은 국민 체감을 증진하고 창의력과 상상력의 문화예술교육 가치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관련 사업은 수혜 시설이 직접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지원구조의 개편, 예술치유와 같은 약자 프렌들리 문화예술교육 사업 확대, 민관협력·대학-사회 연계 등을 통한 사회적 확산, 문화다양성·문화유산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추진,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와 같은 통합플랫폼 운영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소외계층·지역 등을 공급자가 선택하여 실시하는 접근 방식에서, 사회 서비스적 성격을 높이고 수혜자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을 의미한다. 또한, 코로나 시기를 지나며 생태, 문화다양성, 공동체, 성찰, 회복, 공생과 같은 사회적 의제가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는데, 이에 대해 문화예술교육의 힘과 가치를 확장하는 대응 전략이라 볼 수 있다.

2. 더 가까이 - 지역에서 즐기는 문화예술교육

이 전략은 생활과 밀접한 기초 단위에서 문화예술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규 거점 발굴 및 공간 지원을 활성화하고, 지역문화예술교육의 자율 기반 강화 등 지역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학교 안팎의 연계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계획이다.

근래 기초적인 생활권 단위로 문화예술 지원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여서, 문화적 환경을 개선하고 체감 가능한 삶의 질을 높이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마을, 동네 단위에서 여러 주체가 참여하여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문화예술교육이 실현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원화되어 있는 학교와 사회문화예술교육의 결합력도 높아져야만, 시민들은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교육을 더 넓고 다채롭게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3. 더 깊게

문화예술교육 기반 고도화 전략은 문화예술교육사 제도 개선, 학교예술강사 활동환경 개선, 경력개발 지원 강화, 디지털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지원과 같이 변화되는 시대에 인력 관리를 체계화하고, 정책 기반을 다지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다.

많은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관련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예술강사 처

우 문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온 문제들이나, 정책적 대응은 미흡했기 때문에 이번 계획을 바탕으로 전면적으로 쇄신될 필요가 있다. 또한, 빠르게 변화되는 시대 전환의 속도에 문화예술교육 주체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전문성 강화가 중요하다. 최근 관련 연구 프로그램도 디지털 콘텐츠나 융복합 예술 장르를 활용한 교수법과 같이 변화되는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되고 있다. 그러나 서울과 수도권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역에서 대응 가능한 예산이 많지 않은 편이라 접근성이 낮다. 지역 곳곳에서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변화가 급격한 것은 아니다. 이미 문화예술 정책 전반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타 분야와 비교하면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은 여전히 중앙 중심의 하향식 사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한 편, 지역이 주도하는 문화예술교육을 위해서는 기초 생활권 단위에서부터 다양한 주체 간의 협력이 중요하지만, 실제 지역 현장에서 네트워크는 미비한 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계획에서 3개의 전략과제와 별도로 교육부-문체부 협의체 운영, 문체부-지자체-광역-기초로 이어지는 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중요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관건은 역시 실질적인 실행이다. 문화예술교육 강사로서 예술인(단체), 교육청과 일선 학교, 구·군이나 동 단위 행정 기관, 문화 및 복지시설 등 생활권 내에서부터 다양한 기관과 단체 간의 소통과 교류 등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서 구체적인 협업 프로그램으로 구현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절한 예산과 인력이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하다. 지자체와 관련 부처의 관심과, 광역/기초문화재단과 같은 지역 거점 문화기관의 대응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비전과 전략, 문화체육관광부

부산 문화예술교육

남영희

부산대학교 국어교육과 강사

2000년대 초반까지 문화예술교육은 문화교육, 문화나눔, 예술체험과 강습을 포괄하는 일반적인 개념으로 통용되었다. 2005년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정으로 문화예술교육은 정책적 개념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문화예술교육은 인성계발, 정서함양, 창의력 신장과 같은 전통적인 범주를 벗어나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국가의 문화역량 강화, 소통 및 공감 능력 함양, 사회적 성찰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지역 문화예술교육 역시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면서 질적·양적 성장을 거듭했다. 부산에서는 정책 추진 기구로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와 부산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실무협의체를 두고 있으며, 부산문화재단이 실질적인 사업수행을 담당한다. 제1차 부산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 이행률은 87.09%로, 단체 수와 역량,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행정 등 제반 영역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했다. 현재 부산에는 100여 개 단체가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으며, 신규단체의 유입과 성장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문화예술교육 공간은 평생학습센터나 생활문화센터, 주민센터, 자체 공간 등을 포함해 270여 곳에 이른다.¹ 이를 통해 지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과 외연을 확장할 수 있었다.

문화예술교육에서 지역과 지역성이 중요한 의제로 떠올랐던 것은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면서부터다. 물론 문화예술교육의 지역화와 관련된 논의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역 정체성의 발견과 확립, 지역민의 삶의 질 개선, 지역경제와의 연계성 강화, 문화적 도시재생과의 결합, 지역공동체 성장을 추동하는 것은 물론이고 양극화와 고령화, 과잉경쟁과 사회갈등의 심화와 같은 사회문제의 해결에 이르기까지 실로 무거운 역할이 지역 문화예술교육에 부과되었다. 게다가 지역사회 안쪽에서 문화

1 이순욱 외 여럿, 「제2차 부산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23-2027) 수립 연구」, 부산문화재단, 2022, 15-30쪽.

예술교육의 지역적 독자성과 특성을 실질적으로 확립하지 못하고 모호한 구호에만 그쳤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구체적인 실패로서 지역의 현실에 주목한 제2차 부산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23-2027)은 이전과 달리 지역 주도성을 크게 강화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제2차 부산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은 ①제1차 부산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의 이행사항 검토, ②부산의 문화 환경과 정책 분석, ③사전 설문조사 분석, ④문화예술교육 전문가 집담회, ⑤정부 종합계획과의 연계 과정을 폭넓게 아우르면서 수립하였다. 특히 학계와 현장, 관련 기관 전문가 23명을 패널로 초빙하여 2022년 8월 17일부터 24일까지 5차례 진행한 전문가 집담회는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현실과 생생하게 만나는 자리였다. 지역, 지역화, 지역주도성 문제는 부산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수립을 관통하는 핵심의제였다.

전문가 집담회에서는 사전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도출한 다섯 가지 주제, 즉 “①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방향성, ②문화예술교육의 지역화 전략, ③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요구와 도전, ④문화예술교육 정책과 사업의 거버넌스, ⑤문화예술교육의 전환과 미래”를 논의했다. 이를 통해 부산문화예술교육의 목표와 추진전략, 세부과제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관점을 확보할 수 있었다. 제1그룹에서는 기술혁신과 문화환경의 가파른 변화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가치와 방향성을 다시 점검하는 자리였다. 오늘날 문화예술의 개념과 가치사슬이 확장된 만큼 문화예술교육은 전통적인 문화, 예술, 교육의 차원에서 벗어나 독특한 의미와 범주를 지닌 ‘새로운 장(field)’으로 확장적 정의가 요구되었다. 제2그룹에서는 지역의 눈으로 문화예술교육의 지역화 전략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지역, 지역성, 지역화는 단순히 지역 정체성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주민 간의 관계성’과 이를 기반으로 한 ‘활동’에 가치를 두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제3그룹에서는 부산문화예술교육 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였다. 이 과정에서 수행단체, 프로그램, 강사, 학습자, 전략 등 다양한 층위의 논의를 집약할 수 있는 전담기관 설립의 필요성이 강도 높게 제기되었다. 제4그룹에서는 거버넌스를 의제로 삼았다. 이는 지방이양과 문화예술교육의 지역화라는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바탕이다. 진흥원-지역센터, 광역-기초센터의 거버넌스뿐만 아니라 교육부나 교육청과의 협치는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지역 주도성 확보와 직결되는 문제였다. 제5그룹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의 전환과 미래를 진단하였다. 디지털 전환이라는 화두 앞에 기술, 디지털 격차와 리터러시 문제가 시류에 따라 유행처럼 의제화되는 현실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 기술이 도구적이거나 방법론적 모색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제2차 부산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은 ‘어디서나 모두 함께, 부산문화예술교육’을 비전으로 ‘일상에 스미는 문화예술교육, 지역이 이끄는 문화예술교육, 지속가능한 문화예술교육’을 추진 목표로 제시하였다.² ‘지역이 이끄는 문화예술교육’을 3대 목표의 하나로 설정하여 지역 주도성을 명시적으로 담았다. 제1차 부산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이 지역 기반 문화생태계 구축을 지향한 데서 한 걸음 나아간 셈이다. 그런데 부산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은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장기계

2 위의 보고서, 108쪽.

획이므로 종합적·포괄적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거시적인 맥락에서 지향점을 설정해야 하므로 현장의 요구를 섬세하게 담아내기란 쉽지 않다. 지역성과 지역의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정부종합계획과 연동해야 하는 현실에서 혁신적 변화를 도모하는 데도 일정한 한계가 있으며, 무엇보다 기술혁신과 사회변화를 고려하면 5년의 장기계획은 공소한 구호로 전략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렇다면, 제2차 부산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의 방향성은 어떠해야 할까. 크게 문화예술교육 기반 구축과 콘텐츠 개발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지역이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문화예술교육의 기반과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이다. 첫째, 기초센터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 문화예술교육 지역화 전략에서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설립은 지역화의 운명과 맞닿아 있다. 관련 조례 제정과 예산 및 인력 확보는 필수적이다. 또한 기초단위에서 문화예술교육 공간을 발굴·활용함으로써 생활권 중심 문화예술교육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

둘째, 문화예술교육 개념의 확장과 정책적 패러다임이 전환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부산문화예술교육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전용공간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상당한 규모와 예산, 시설과 장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장기과제라 할 수 있다. 전담기구와 전용공간은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체계적·안정적 지원과 거버넌스의 구심점이자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통합관리의 플랫폼이다.

셋째, 협력체계와 거버넌스를 확보해 나가야 한다. 이즈음 문화예술교육이 다양한 주민 활동과 생활 문화, 평생교육, 사회복지, 도시재생, 교육공동체와 중첩되는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여 통합적 사회서비스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무엇보다 기초단위에서 소규모 거점화를 통해 주민 주도의 공론장을 활성화 하면서 지역 내부의 문화적 응전력을 키워 나가야 한다. 이는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구축과 지역 문화예술교육 자립성 강화의 핵심이며, 문화예술교육 거버넌스의 확보의 전제조건이다.

넷째,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부산문화예술교육의 실태를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사업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지속적인 환류 구조를 제도화해야 한다. 이는 이미 수립된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의 실질적 효용성을 드높이고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부산문화예술교육 콘텐츠 개발 전략이다. 첫째, 수행단체 주도형 콘텐츠를 연구 개발해야 한다. 문화예술교육 현장 상황과 맥락, 상호작용의 과정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있는 수행단체가 주도하는 콘텐츠 개발은 부산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전반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해 수행단체와 학습자, 전문인력, 시설/기관 관계자 등과 다각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도 적지 않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부산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고도화해야 한다.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디지털 활용 격차 해소에도 섬세한 눈길을 주어야 한다. 또한

디지털 기술과 매체를 활용하는 디지털 기반 융·복합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부산형 창의 콘텐츠를 육성해 나가야 한다.

셋째, 문화예술교육의 가치를 인식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는 지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문화적 힘살을 키우는 일이다. 치유와 회복(resilience), 인권, 문화다양성, 세대 갈등과 소통뿐만 아니라 기후위기와 빈곤, 혐오와 차별 등 전지구적 과제에 이르기까지 시대적 아젠다와 가치들을 재인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콘텐츠 개발을 독려해야 하는 까닭이다.

넷째, 지금 여기의 '지역민의 삶'에 주목하고, 부산지역의 문화 환경을 반영한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노년 및 중·장년층의 확대와 다문화가족, 대학 진학을 위한 인구 유입의 확대라는 부산의 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해 노년과 중·장년, 대학생, 다문화가족 대상 프로그램 개발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오늘날 지역은 새롭게 '발견'되는 삶의 장소이자 중요한 정책적 의제다. 이제껏 지역은 국가정책을 통해서나 정치논리에 따라 양적인 확대를 거듭하면서 무차별적으로 소비되거나 호출된 측면이 강하다. 그럼에도 지역에 관한 인식과 성찰은 부족했으며, 지역의 소외나 배제도 여전하다. 지역의 문화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민의 문화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눈으로 지역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회와 실천이 요청된다. 이것이 부산문화예술교육의 미래다.

풀뿌리 문화예술교육으로 전환

고윤정

영도문화도시센터 센터장

내가 근무하는 영도구는 광역시 자치구 중 가장 인구 소멸 위기가 높다. 2020년 문화도시 영도 비전 2025를 설계할 때 주민들과 라운드테이블 만 34차를 진행했는데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아이들이 너무 많이 준다는 고민이었다. 문화도시가 아이들에게 마음껏 놀 수 있는 공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콘텐츠, 아이들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이웃들이 많아지도록 애쓰달라고 하셨다.

기초지자체로 와서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기 전까지는 문화예술교육이 중요하다는 점은 알았지만 생활문화의 한 분야나 문화 향유권 차원에서만 생각해 봤지 도시 의제까지 확장해 사고하지 못했다. 지역마다 인구 소멸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청년 유입과 저출생 극복이 중요 해지고 ‘아이들이 살기 좋은 동네’라는 도시 의제 차원에서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이 큰 공감을 얻고 있다.

그런데 기존에 문화예술교육 추진 방식으로 기초단위를 설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그동안 문화 예술교육 사업 방식은 대개 ‘프로젝트 공모’다. 자격 기준이 중요해 경험 있는 강사들이 선정되고, 프로그램은 정보력 빠른 시민이 신청해 수요를 채웠다. 그렇다 보니 자원이 풍부한 곳과 그렇지 못한 곳 사이에 격차가 발생했다. 영도처럼 인구 위기를 겪는 곳일수록 그 ‘경험 있는 강사’ 인력풀이 적고 그 ‘경험’이 있다고 꼭 좋은 교육자인가 하는 고민이 든다.

결국 아이들에게 진심인 ‘동네 문화예술교육자’가 많아야 한다. 이런 분들을 찾아 함께 공부하면서 경험을 쌓아 나가야 하는데 ‘프로젝트 공모’ 방식의 문화예술교육 사업 방식은 진입장벽이 높다. 간혹 광역 재단에서 신규 문화예술교육자 양성 커리큘럼을 제공하지만 열정은 가득하나 무경험자라면 신청하기 어렵다.

한편으로는 경험이 있어야 좋은 문화예술교육자인가 생각하게 된다. 영도에서 활동하는 마을 교육 공동체 리더나 의지 높은 학부모들, 동네 예술가들을 만나면 무궁무진한 아이디어와 사랑을 듬뿍 갖추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더랬다. 청학동에 통학로가 위험하고 생각한 학부모들이 모임을 조직했다. 센터는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시라고 독려했을 뿐 특별한 역할을 하지 않았다. 학부모님들은 동네 아이들과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프로젝트를 했고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야외 펜스

에 오랫동안 전시를 하는 행사를 기획하셨다. 이들은 하는 활동은 문화예술교육이 아니라고 할 수 있나?

한 동네 예술가는 일부 보조금과 자비를 투자해 아이전이라는 프로젝트를 만들고 아이들을 전시회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주민들을 초대해 아이들이 신나게 살 수 있는 동네 문화의 필요성을 나누었다. 매주 청소년들이랑 플로깅을 하고 해양 쓰레기 오염 이슈를 문화적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분, 동네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수집해 문집으로 만드는 청소년 동아리 지도 교사들을 만나면 그건 문화예술교육이 아닌지 혼란스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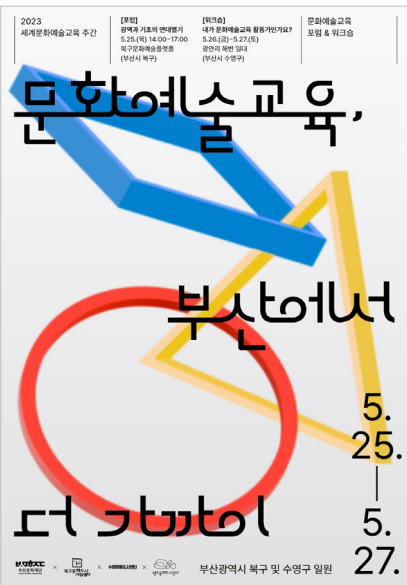
미술, 음악 같은 장르 기능을 가르쳐도 아니고 오랫동안 교육 프로젝트를 운영해서도 아니었다. 아이들을 창작자이자 지역 주민의 일원으로 적극적으로 초대하는 교육자의 태도와 '문화적' 운영 방식이 주효하지 않나 싶다. 그렇다면 문화예술교육은 더욱더 동으로, 골목으로 들어가 누구든 문화예술교육자라는 관점에서 출발해야 하지 않나 싶다.

사실 기초 중심의 문화예술교육은 접근성 차원에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다. 아이들, 주민들이 최대한 걸어서 15분 거리 내 문화예술교육 공간이나 문화예술교육자를 만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계속 그런 공간을 공공에서 지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면 민간 및 유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 동네 카페가, 서점이, 작은 도서관이 아이들을 환대하는 문화예술교육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기초에서 촉진하고 매개해야 한다.

영도는 섬이고 산복 도로가 많다. 동별로 교통편도 많지 않아 동과 동 사이에 이동성이 높지 못하다. 기존 방식으로 거점 문화예술교육 공간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집 가까이 내 학교 가까이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문화도시 사업이라면 언제든지 무상으로 공간을 빌려주시겠다는 분들에게 '연결 공간' 30곳을 후원받았다. 그 공간을 기반으로 사계절 창의예술 학교를 추진하면서 작게 작게 더 작게 흡수되는 문화예술교육을 만들어가고 있다.



2023 문화도시 영도 겨울 창의예술학교 홍보 포스터



2023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연계 '문화예술교육, 부산에서 더 가까이' 모집 포스터

그러나 영도에서 이렇게 사업을 펼칠 수 있던 것은 문화도시 사업이라는 예산과 사업 구조 때문이다. 문화도시 사업은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을 스스로 구상해 추진하게 한다. 덕분에 지역 현황에 맞게 설계 되고 기반을 조성하는데 주력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기초 지자체에서는 이런 기반 구축 활동이 예산 부재로 쉽지 않고 지자체에서 정책적 공감대를 확보하는 점도 어렵다.

그래서 지금은 ‘광역에서 기초로’라는 문화예술교육 정책 기초를 더욱 분명히 하고 기초단위에서 튼튼하게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광역 단위에서 지원하는 시스템 설계가 절실하다. 광역은 문화예술교육 정책 방향을 잡고 시범적이고 실험적인 사업과 거점이 되는 공간 운영하는 것과 함께 무기 초 단위 거점 단체를 집중 육성해야 한다.

결국 사업은 사람이 조직이 하는 것이라고 봤을 때 기초에서 각자의 실정에 맞게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사람을 키우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초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설립을 광역에서 견인하고, 기초는 주민들과 도시 의제 차원에서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확장하고 현장에 맞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는 윈-윈 작전이 필요하다.

부산이 15분 도시를 표방했다. 15분 도시는 동네권 활성화 아닌가. 내 동네에서 문화예술을 만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정책과 실천 계획이 이제는 나와야 한다.



여름창의예술학교



영도 어린이 정원탐사대



청소년 해카톤 대회

문화 예술과 교육

이옥상

오픈스페이스배 교육팀장



부산은 2030 세계 엑스포 유치로 분주하다. 근대 수도로서의 역사성과 해안 절경과 휴양, 레저, 영화 그리고 조선통신사, 동래학춤, 수영야류, 다대포 후리소리 등 전수 문화 자양분도 가득하다.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에 진입한 나라의 제2위 도시로서 세계적 도시가 되기에 충분한 문화적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 10여 전까지 꼬리표처럼 달고 지내던 ‘문화볼모지’라는 수식은 옛말이 되었다. 2023년은 문화예술교육적 전환점에 서 있다. 올해부터 시작하는 제2차 부산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에서는 ‘어디서나 모두 함께’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2010년(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설립)부터 시작한 지역문화예술교육은 그동안 가치 발견, 전문성 확보, 협력체계의 마련을 통해 연구,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체계를 다져왔다. 특히 지역성을 바탕으로 한 많은 문화예술교육단체의 설립, 기초단위 접근을 통해 뿌리내린 다양한 사업과 자발적 형태의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어 그동안 해온 인프라의 구축과 우수프로그램의 축적으로 이룩한 질적 성장의 자신감으로 부산시민 누구나, 어디서나, 함께하는 일상 속 문화와 문화예술교육을 즐기는 지속 가능한 목표를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이제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에 진입했다. 선진국을 가능하는 척도가 그 나라의 경제력에 기준을 두고 있지만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문화적 역량과 소양을 갖춘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과 발전을 위한 높은 수준의 교육적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과거 근대사회로부터 현대사회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유럽의 세계대전으로 인한 전후 복구와 사회적 혼동을 틈타 뉴욕은 금융, 문화 및 상업의 중심지가 되면서 경제적 부흥을 맞았다. 이 도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의 본거지였으며 우뚝 솟은 고층 빌딩

과 함께 세계 문화 수도로서의 투자와 정책을 멈추지 않았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미술의 센터가 된 뉴욕현대미술관을 포함하여 뉴욕필하모니, 브로드웨이의 뮤지컬, 세계 최고의 예술가, 작가 및 지식인을 위한 이민 정책과 센트럴파크의 조성을 통한 문화 정책으로. 이 도시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영향력 있는 도시 중 하나로 남아 있으며 계속해서 미국의 번영과 권력의 상징이 되고 있다. 미래 사회는 예술, 음식, 패션, 영화, 게임 등의 인프라 환경 구축과 다양한 상상력이 요구되는 문화자본주의 시대다.

문화도시로서의 부산은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지속적이고 행복한 삶의 질과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부산시의 문화정책과 부산시민의 역동적 참여가 어우러져 부산국제영화제를 통한 국제적 영화 도시의 면모를 갖추었으며 비엔날레 전용 미술관인 현대미술관의 개관, 미술시장의 중심이 된 아트부산전을 관람하기 위해 찾아오는 전국 미술 애호가의 발걸음이 자연스러운 문화도시의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다. 2010년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설립된 이후 지닌 10년이 넘는 기간 부산의 문화예술교육은 지역의 역사, 자연환경, 다양한 기관과(박물관, 영화의 전당, 미술관, 국립과학관, 교육청, 도서관, 복지관 등)의 협력 체계를 통한 프로그램의 개발, 융합형 교육자원 발굴을 통한 의미 있는 질적 성장을 이루었다. 그동안의 성과로 100곳이 넘는 문화예술교육단체가 생성되고 활동하고 있으며 300여 곳에 가까운 문화예술교육 공간을 구축했다.

2018부터 2022년까지 이행된 제1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대로 삶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의 가치 실현과 지역기반 생태계를 구축하고 교육청과 협력한 학교문화예술교육과 다양한 수요자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고 자료화하였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제2차 종합계획에서는 지역이 이끌고 일상에 스미는 어디서나 모두가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의 목표와 비전이 제시되었다. 부산시가 제시하는 15분 문화도시 정책과 맞물려 부산시민은 유아부터 노년까지 수요자 중심 프로그램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준비 중이다. 지난 10년간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5년, 10년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효율성과 양적 성장의 방향성이 보이는 제2차 종합계획이 놓치기 쉬운 부분에 대한 점검과 대비이다.

최근 공고되고 심사 결과가 발표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2023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꿈다락 문화예술학교>의 경우 과거 다양한 전문가 집단(어린이는 무엇을 믿는가-작가, 국공립 미술관, 꼬마작곡가, 가족 오케스트라-전문 연주단체, 박물관연계 프로그램- 박물관협회 등)과 연계한 사업의 경우 차별성과 전문성을 중심으로 하여 사업비의 다양한 지원을 통한 강사비, 프로그램개발 비용 등이 사업 진행 매개자 주체에 따라 차별화되었다. 문화예술교육 체감도 제고 정책에 따라 지원 구조 개편에 의해 다양한 형태의 지원사업이 프로그램의 특수성과 강사 체계와 상관없이 250여 개의 지원 프로그램이 2천만 원이라는 균등한 사업비와 균등한 강사비를 책정하여 진행하도록 통합했다. 이는 관리의 효율성과 외연 확장에는 긍정적이나 사업의 다양한 접근과 매개자의 자율적 운영체계에서는 능동적 태도보다는 수동적 태도를 보일 우려가 있다고 생각된다.

문체부가 제시한 계획 목표 중 '누구나'와 '더 가까이'는 효과적이나 '더 깊게'는 다소 우려되는 지점이 된다. 10년 전 문화예술교육 초기의 기능 중심 교육, 단순 체험 교육, 지식 전달형 가르치는 교육의 편리성 교육이 다시 문화예술교육 현장에 나타날까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행히 부산문화재단의 지원사업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양적 체계와 질적 성장을 위한 다양성을 갖추고 있다. 우리동네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 실험실, 꿈다락토요학교로 구분되어 공모, 지원하며 사업의 성격에 따라 지원금도 차별화 되어있다.

수요자 맞춤형교육, 지역문화예술교육 자율성 강화, 입체적 고도화는 목표와 비전 제시만으로 쉽게 도달되는 전략이 아니다. 세심한 세부 실천 전략과 문화예술교육 매개자 인력의 직업인으로 사회적 대우와 지속적 참여를 위한 구조 마련이 되어야 한다. 부산에 유아문화예술교육 전문가가 몇 명이나 있을까? 노인들의 과거의 삶을 이해하고 그들의 성장 퇴보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단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교육전문가는 몇 명이나 될까?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의 제2도시 부산은 이제 세계엑스포 유치로 통해 세계문화도시로의 비상을 꿈꾸고 있다. 우리는 뉴욕처럼 높은 빌딩뿔을 갖추었고 브록클린 다리보다 멋진 광안대교와 북항대교를 갖추고 있고 MOMA(뉴욕현대미술관)와 구겐하임 미술관의 퀄리티에 다가가고자 노력하는 미술관들을 갖고 있다. 또한 영화도시 위상에 맞는 영화의 전당과 영화제도 가지고 있는 타시도민들이 부러워하는 문화도시 부산에 살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자산을 진정한 선진국 형태로 완성하는 것은 교육적 세심함이라 생각한다. 뉴욕현대미술관(MoMA)이 2019년 가을 대대적 리모델링을 통해 재개관 했다. MoMA는 미술관이 보물 저장장소로 인식되던 90년 전 시각예술의 실험실을 만든다는 취지로 설립됐다"면 "이번 확장은 단순히 공간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관람객들이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술관 중심부에는 최첨단 설비와 음향설비를 갖춰 다양한 실험적 퍼포먼스를 할 수 있는 스튜디오가 있고 미술관 전체가 유기적으로 결합해 하나의 살아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교육 공간으로 변화했다. 미술관이 실험과 학습의 장소로 대중에게 열려 있다. 지금까지 다소 전통적인 방식으로 작품을 선보였다면 이제는 모든 매체가 서로 대화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제 부산도 지금까지 갖춘 문화적 인프라 속에 교육적 성찰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이는 다양한 주체들의 합의를 통해 동시대성을 갖춘 세심한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문화예술교육은 행복한 삶을 위한 여정을 돕는 활동이다. 즐기고 안전한 유아교육, 따뜻한 체험과 다양한 경험과 자신의 터전인 지역의 자연환경과 함께하는 초등교육, 질문과 호기심, 문제해결을 통한 자신 정체성을 발견하는 청소년 교육, 새로운 도전과 함께하는 청년, 빠르게 바뀌는 동시대 감각을 일깨우고 심과 즐거움이 있는 40-50대의 교육, 위로와 안정적 평온함이 깃든 노년교육까지 부산시민의 삶이 문화가 삶 속에 깃든 평생 교육이 되도록 세심한 질문과 점검이 필요한 때이다.

학교 미술교사로 신학기 2학년 학생들이 신입생을 위한 '발칙한 상상으로 꾸미는 학교 공간'이라는 수업이 새로운 위로와 질문을 던진다.

새내기들 만나서 반가워. 요즘 어떻게 지내?



'발칙한 상상으로 꾸미는 학교 공간' 수업 현장 사진

문화예술교육 해외 동향

이 동 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의제정책센터 선임전문관



1. 유네스코 내 문화예술교육 의제 형성 역사

유네스코(UNESCO)는 제2차 세계대전 종료 직후 국가 간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린 정치, 경제 분야 대신 교육, 과학, 문화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을 통해 인류의 비극적 전쟁 재발을 막고 항구적인 평화를 달성하고자 만들어졌다. 창설 이래 7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유네스코는 다양한 분야에서 ‘조용하지만 힘 있는’ 국제 의제들을 선도해왔고, 특히 문화와 정보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는 지정 유산(Designated Heritage Sites and Items) 사업을 도입하여 기구의 역할과 지향점에 관한 대중적 가시성을 높이기도 하였다. 다만, 교육, 과학, 문화에 집중하는 유일한 유엔 전문기구라는 장점에도 분야 간 상호 협력을 통한 결과물을 생산해 내기보다는 각 분야별로 서로 뚜렷한 전문성과 목표에 기인한 개별적인 성과를 내놓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유네스코 헌장에 나오는 내용과 같이 ‘평화의 방벽’은 인간의 마음에 쌓여, 유네스코 분야 간 장벽을 허물고자 하는 시도는 진작부터 있어왔다. 특히 유네스코가 국제사회 교육 의제를 수립한 ‘포레 보고서(1972)’와 ‘들로르 보고서(1996)’는 미래사회 교육 이정표로서 문화 분야와의 긴밀한 협업의지를 드러냈고, 1982년 멕시코에서 개최된 세계문화정책회의에서는 문화와 교육의 협력을 통한 상호 시너지 극대화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유네스코 내부에서 분야 간 경계를 허무는 통섭적(interdisciplinary)인 시도는 21세기 초 전후하여 본격화 되었다. 유엔은 새천년개발목표(MDGs) 이후 2030년 달성을 목표로 훨씬 포괄적이고 야심찬 내용으로 준비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중 교육 분야 SDGs 달성 선도기관으로 유네스코를 지정하였고, 이후 유네스코에서는 분야를 넘나드는 SDGs 관련 다양한 의제들을 폭넓게 다루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유네스코는 2000년대 이후 문화예술을 콘텐츠로 하는 교육이 미래 세대에 미치는 효과와 영향성에 주목한 회원국들의 관심과 요청에 응답해 2006년 “리스본 예술교육 로드맵”과 2010년 “서울어젠다:

예술교육 발전목표”를 채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문화예술교육은 유네스코 교육과 문화 간 통합 접근 기반 협업 사업으로 구체화되었다. 다만, 2010년 이후 시간 경과에 따른 교육과 문화 분야의 다양한 변화들을 반영하려는 적극적인 시도들이 이어졌고, 올해 5월 개최된 유네스코 제216차 집행이사회에서는 금년 말 개최될 제3차 국제 컨퍼런스(12월 아랍에미리트 예정) 중 서울어젠다 문화예술교육 프레임워크 개정안이 채택되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과 활동에 동참할 것을 결의하였다.

2. 유네스코 문화예술교육 프레임워크 개정 주요 내용

유네스코 문화예술교육 프레임워크의 핵심은 2010년 서울에서 개최된 제2차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개최시 채택한 서울어젠다에 담겨 있다. 서울어젠다는 국제사회가 문화예술교육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해 숙고해온 모든 내용을 반영한 결과물로, 2011년 제36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유네스코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서울어젠다는 3개 목표와 13개 전략으로 구성되며, 내용의 핵심은 일상성, 구체성, 확장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일상 속 지속 가능한 예술교육 실천 촉구(일상성), 성과를 점검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 이행지침 제공(구체성), 향후 국제협력을 통한 문화예술교육의 방향성 선도(확장성)를 추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상기 프레임워크가 제시하는 문화예술교육 발전목표는 여전히 유효하다. 즉, 프레임워크 목표와 전략이 장기적 시각에서 피교육자의 감수성과 사회적 능력을 근본적으로 계발하는 평생교육을 포괄하며, 가능한 모든 의사결정자들(교육자, 예술가, 지역사회)이 상호교류와 합의를 통해 최선의 기준을 마련하도록 장려하고 있는 점도 그 유효성을 시사한다. 또한 동 프레임워크는 문화 다양성과 창의·혁신적 역량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지속가능발전과 전지구적 도전과제 대응을 목표로 하여 시기를 불문한 보편타당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교육과 문화 간 통합적 접근방식에 기인한 문화예술교육 프레임워크의 대원칙은 시간이 지나도 불변할 것으로 보이지만, 진보하는 시대적 필요성과 도전과제들이 동 프레임워크에 적절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은 계속 있어왔다. 특히 전례 없었던 글로벌 팬데믹 창궐 및 시로 대표되는 과학기술의 비약적 발전과 인권문제 대두 등은 그 필요성을 심화시켰다. 이에 국제사회는 서울어젠다가 제시하는 문화예술교육 로드맵과 국제사회 의제가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지난 10년간 문화창의영역의 지형변화 및 사회적 흐름과 논의의 진전 상황을 반영한 개정안 마련 필요성을 2020년 들어 본격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2022년 40년 만에 멕시코에서 개최된 세계문화정책회의(MONDIACULT 2022)에서도 재확인되었으며, 여기서는 유산, 역사와 전통지식, 문화다양성, 다언어, 디지털문해를 포괄하는 예술교육이 향후 문화예술교육의 필수불가결한 내용임을 선언 형식으로 공표하였다. 한국은 이러한 분위기를 놓치지 않고 2022년 5월 국제전문가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여 프레임워크 개정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 도래로 관심이 집중된 디지털 전환과 팬데믹 이후 가속화된 국민들의 문화적 수용성 변화, 생성형 AI를 보급과 창조산업계가 직면한 도전 등이 향후 문화예술교육이 주목해야할 공동 의제로 인식되었다.

올 초부터 유럽, 남미, 아태지역 모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및 국가별 유관기관



을 아우르는 지역별 자문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이는 제216차 집행이사회에서도 중요한 이정표 중 하나로 소개되었다. 집행이사회 종료 직후인 5월 25-26일에는 한국 정부 지원으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이해당사자 간 대화(Multistakeholder Dialogue)가 개최되었다. ‘상호작용 및 몰입적 예술 경험으로서의 문화예술교육’ 주제의 라운드테이블과 부대행사로 이루어진 이 대화는 AI를 위시한 디지털 기술이 문화예술교육의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될 것으로 보고 국제사회 관심과 의제화를 촉구하였다. 상기 지역별 전문가회의와 이해당사자 간 대화에서의 논의사항들은 올해 11월 제42차 유네스코 총회 전까지 유네스코 사무국 및 전문가 차원의 실무회의를 거쳐 구체화된 후, 12월 UAE회의에서 명문화되어 유네스코가 선도할 문화예술교육 프레임워크 개정안으로 탄생할 것이다.



3. 향후 전망과 제언

참여한 입장 대립이 노정되는 유네스코 의제들 중에서 문화예술교육만큼은 국가별 입장차이가 거의 없는 보편타당한 미래사회 의제로 인식되고 있다. 향후 유네스코 유산과 문화 다양성 주제에서 다루는 다양한 소재들을 바탕으로 급격한 기술발전예 대응할 수 있는 비판적 창의성 교육이 개정안에 적극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그간 교육 및 문화 분야 상호 교류를 통해 축적된 다양한 내용들이 폭넓게 프레임워크 개정안에 반영될 전망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한국은 문화예술교육 프레임워크 도출 과정 및 이후의 후속 논의 과정에도 활발히 임하여 국제사회에서 동 분야 선도국가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한국이 향후에도 문화예술교육 관련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려면 올해 중 구체화될 문화예술교육 프레임워크 개정 과정 중 적극 참여하는 것은 물론 문화예술교육 관련 다채로운 성과와 우수 사례들을 적극 소개하고 국제사회의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산발적, 개별적으로 소개된 기존 성과들을 최대한 객관화된 언어로 점검·정리하여 의제 고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계와 유관기관이 폭넓게 국내 의사결정 과정에 기회마다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교육이 앞으로 분야를 넘나드는 국제사회 통섭의 주제임과 동시에 교육과 문화 각각의 고유 영역의 발전도 동시에 견인하는 활력의 기폭제가 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유네스코 제216차 집행이사회 중 한국 대표단 발언 광경
© UNESCO. Cyril BAILLEUL / 216e session, 2023



골목문화를 되살리는 민간 문화공간 활성화를 기대하며

최 시 내
가야트라 대표



부산지역 생활권 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연구(2022) 보고서에 대한 단상

부산이라는 대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문화공간을 필요로 할까? 퇴근길에 한두 시간 밴드 동호회 활동을 할 수 있는 연습실,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학부모들과 독서모임을 할 수 있는 단골 카페, 주말이면 이웃에 사는 미술가가 소개하는 그림을 보며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작은 전시장, 마을축제를 준비할 수 있는 회의실 등 그 요구는 다양할 것이다. 집과 집이 마주하는 사이, 사적 공간에서 공적 공간으로 이어지는 길, 개인에서 지역사회로 열리는 공간이 골목이다. 이 골목에서 어느 날 새로 생겨 반짝이는 가게의 불빛을 발견하면 궁금해진다. 뭐 하는 곳일까? 저기서 뭘 할 수 있을까? 상상하게 된다. 이웃과 인사하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담벼락 아래 공동 평상에서 어른들이 담소를 나누던 골목의 정감을 매일 다니는 골목에서 다시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현대 대도시의 삶이 다양하고 복잡해진 만큼 문화공간의 형태도 매우 다채로워지고 있다. 인접 지역과 먼 지역을 연결하기도 하고 예술가와 비예술가 또는 이웃과의 만남을 주선하기도 하고 비상업과 상업업을 섞어 놓기도 하는 등 기존의 경계를 허물어 새로운 형태를 창조하는 공간이 자생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카페가 공연장으로, 도서관이 놀이터로, 서점이 영화관으로, 낡은 주택이 전시장으로 변신하는 민간 문화공간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규정화된 예술문화 향유뿐만 아니라 가족, 사교, 일 등의 일상생활 영역 안에서 펼쳐지는 문화 활동이 필요하며 자발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공간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가 발간한 『부산지역 생활권 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연구』 보고서는 비 공식적인 생활문화공간에 주목하여 이를 활성화하는 것이 지역 문화예술 환경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제시했다.

생활문화의 공식 공간으로서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이 추진된 이후 2022년 현재까지 전국 단위로 172개소 개관하였고 그 중 부산이 21개소로 가장 많다. 부산의 생활문화센터는 19개소가 기초지자체가 직영하고 있는데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주체가 마련되지 않아 동주민센터 부속 시설로 머물고 있거나 수동적인 참여만 가능한 단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자원과 협력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운영이나 공동체문화 조성 및 주민의 일상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운영시간도 야간과 주말을 제외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공식 생활문화공간이 시민 접근성이 낮고 커뮤니티 거점으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면, 생활권 내 문화적 행위가 발생하는 기존의 공간을 활용·발전시킬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 공간이란 민간에 의해 조성·운영되는 곳으로 기초지자체 내의 범위에서 주민들의 이용이 가능한 소규모의 공간들이다.

보고서에서 다룬 공간들은 부산의 사례들을 중심으로 1)클래식 음악 중심 소공연장, 2)개인 운영 미술갤러리, 전시장, 3)소규모 민간 예술집단 운영 소극장, 4)동네 책방, 5)카페 같은 여가 시설을 겸한 문화공간 - 5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조사되었고 전문가 집중 인터뷰(FGI)와 스터디 세미나를 통해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과제를 도출했다. 공간 운영자들이 직접 현장 연구자로 참여하여 실태에 충실히 접근하고 현장성에 기반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각 영역별로 참여한 현장 연구자이자 공동연구원들은 각 공간을 운영하는 특색있는 사례를 소개하면서 운영상 고충을 토로하는 한편, 문화공간 운영에 대한 사명감과 함께 민간문화공간의 공공적 의미를 짚고 이를 토대로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예술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고, 예술가와 시민이 스스럼없이 만날 수 있는 일상의 공간에서 예술가들은 예술 활동의 장을 펼치고 시민들은 문화예술을 향유함으로써 정서적으로 안정을 얻고 있음을 늘 목격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¹ 라는 김은숙 스페이스 움 대표의 글은 이같은 공간들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한다.

인천시에서 발간한 연구 보고서에서는 소규모 민간문화공간이 창조, 교류, 집적, 전달의 기능을 가지며 이러한 기능들이 복합적이고 융합적으로 내재되어 있다고 하면서 문화·예술적, 사회·복지적, 경제·산업적 측면에서 가치와 기대효과가 크다고 하였다. 또한 문화를 매개로 한 지역민들의 공동체성 함양 및 일상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적합하여 그 중요성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²

부산의 미술관, 박물관, 문화회관, 도서관 등의 공식적 문화 기반 시설이 광역시 중 가장 수가 적다고 하여 새로운 대규모 시설을 구축한다 해도 시민의 접근성, 개인적 문화 향유 차원을 넘어 문화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동체성 회복으로 이어지는 커뮤니티 거점으로 그 기능을 발휘할지는 의문이다. 막대한 비

1 부산문화재단(2022), 부산지역 생활권 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연구, 59쪽.

2 인천연구원(2021), 인천시 소규모 민간문화공간 지원 체계화 방안 연구, 11~13쪽.

용을 들여 조성한 생활문화센터가 시설 유지에만 머물러 있고 규모와 시설을 갖춰 등록 문화시설로 조성된 문화공간들은 일상적인 시민문화활동을 충분히 담을 수 없기 때문이다.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운영 중인 문화공간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통해 지역문화의 다양성과 자생력을 높이는 전략이 시민의 일상적 문화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더 타당해 보인다.

『부산지역 생활권 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연구』에 참여했던 안지현 사이트브랜딩 이사는 문화예술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는 카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그동안 새뜰사업, 도시재생 사업 등의 하드웨어 구축 사업을 통해 마을 공동체를 위한 문화예술 거점시설들이 다수 조성이 되었지만 손쉬운 토지 매입을 위해 마을에서 동떨어진 곳에 공간을 조성하거나 또 새로이 조성된 거점시설들의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문제, 공간 운영자 부재에 대한 이유로 또다시 방치되어 세금만 축낸 공간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이렇게 문화예술 생산 및 확산의 생태계가 이미 조성되어 있는 동네카페들을 15분 도시의 생활권 기반 문화 거점공간으로 지정한다면 새로운 공간을 조성하고 그 공간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쌓인 노하우를 통해 보다 손쉽게 보다 많은 이들에게 문화예술을 확산할 수 있을 것이다.”³ 라고 하면서 새 시설을 짓기보다 기존의 인적·공간적 보유 자원을 돌아봐야 한다는 점을 잘 지적해 주고 있다.

하지만, 이들 민간 문화공간들이 운영자 개인의 노력만으로 자생적인 수익구조를 만들어내고 운영 관리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보장할 인력을 확보하기는 어렵다. 이들 공간에 대한 현재의 지원 구조는 관련 기관별 사업으로 흩어져 연계되지 못하고 있음을 FGI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보고서에서 제안한 생활권 민간 문화공간 활성화의 방안은 이러한 공간들을 중요한 기반 문화기반시설로 인정·지원하는 발상 전환으로 ▲문화공간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지원 ▲문화공간의 자율성 보장 ▲지역 문화생태계의 핵심 요소이자 플랫폼으로서의 기능 부여 - 라는 3가지 방향이다. ‘우리동네 문화공간(가칭) 인증제’를 중심으로 인력, 재정, 네트워크, 프로그램, 제도의 5개 부분 지원을 핵심전략으로 설정하고 각 부분별 세부적인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 ① 인력 영역: <굿모닝 예술인> 사업 확대를 통한 인건비 지원, 기획자 아카데미 운영
- ② 재정 영역: 인증된 공간의 중장기적 임대료 지원, 운영비 지원, 수익창출 제약 철폐, 통합 포인트 제도 운영, 행정서류 간소화
- ③ 네트워크 영역: ‘우리동네 문화공간 네트워크’ 구성, 역량강화 교육, 홍보 다각화, 유관기관 연계 홍보, 커피숍과 연계 홍보
- ④ 프로그램 영역: 네트워크 페스티벌 개최, 유사 정책 간 연계 협력, 협력사업 개발
- ⑤ 제도 영역: 생활권 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우리동네 문화공간 인증제 실시, 우리동네 문화공간 총괄 위원회 운영

위와 같은 제안이 실행된다면 그동안 생활문화 활성화 정책이 생활문화동아리를 지원하는 활동 주체 지원에서 기초 단위별로 운영의 편차가 큰 생활문화센터 조성으로 전환되었다가 생활권 내로 더욱 구

3 부산문화재단(2022), 같은 연구보고서 89쪽.

체화 되고 다양해지는 민간 공간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화성시의 <우리동네 문화생활 활성화 사업>,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의 <우리동네 문화공유공간>, 전주문화재단의 <우리동네생활 문화공간지원사업>, 광명시 <민간 문화공간 활성화 지원사업>, 대구와 인천, 고양시 등의 지원 조례 제정 시행과 같이 이미 추진되고 있는 타 지역의 선 사례들도 있다. 또한 지난 3월에 문체부가 발표한 '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추진 전략'에는 지역 서점, 갤러리, 카페 등 근거리 민간시설을 활용하여 누구나 동네에서 누릴 수 있는 민간 문화공간 활성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상위 정책사업의 바탕 위에서 부산지역 민간문화공간 활성화의 제안 사업들도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

공유와 참여, 협력이 일상 속 민간문화공간의 가치로 발휘된다면 이곳들의 공공적 기능이 더욱 확대되면서 시민의 문화권이 증진되고 골목문화가 되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이미 조성되어 기초지자체가 운영하는 생활문화센터의 기능도 놓치지 않았으면 한다. 최근에 필자가 살펴 본 부산지역 생활문화센터는 주거지 내 깊숙이 위치하면서 반듯한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마을공동체 활동가들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면서 문화공동체를 알뜰히 만들어가는 곳도 있었다. 운영인력과 실별 활용도가 부족하여 문을 닫아 둔 곳을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웠다. 거주지와 일터 등에서 일어나는 지역의 문화 활동은 각 공간의 운영 주체와 관리 기관이 누구인지 가리지 않아야 한다. 민간 이든 공공이든 협력하여 주민이 그 공간의 힘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민간 문화공간과 생활문화센터가 골목에서 연결되어 더욱 다채로운 시민 문화활동의 공간적 기반이 되어줄 수 있는 과제 또한 모색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부산문화재단

- **4년 만에 마스크 없이 즐기는 조선통신사 축제 - 평화로(4.5)**

부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미연, 이하 재단)은 5월 5일부터 5월 7일까지, <조선통신사 축제-평화로>를 개최했다. 코로나의 여파로 지난 3년간 비대면 또는 축소하여 진행했던 조선통신사 축제가 정상 규모로 돌아온 것은 4년 만이다. 올해는 예년처럼 옹두산 공원 및 광복로 일원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 **부산문화재단-부산디자인진흥원, 시민행복 실현을 위해 맞손(4.12)**

재단은 4월 12일 부산디자인진흥원(원장 강필현)과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디자인산업 발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핵심 역량과 인프라를 최대한 발휘하여 민선 8기 시정의 궁극적 목표인 '시민행복' 실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부산문화재단,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대상 <찾아가는 누리마켓> 운영**

문화누리카드는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017.12.31. 이전 출생자) 대상으로 문화·예술, 관광, 체육 분야 활동 향유를 지원하는 카드이다.

- **부산문화재단, 청년 예술작품 구독 사업 개최(5.12)**

재단은 5월부터 12월 말까지 부산 내 주요 공간에서 시각 예술분야 청년예술가들의 작품을

일정기간 향유할 수 있도록 분기별 작품 전시를 지원하는 <청년 예술작품 구독> 사업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부산문화재단, '[기획형] 해외레지던시지원' 공모 추진(5.19)**

재단은 예술가의 창작역량 강화 및 국외 문화예술교류 활성화를 위한 <레지던시 활성화 사업>의 '[기획형] 해외레지던시지원'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부산문화재단, 국제예술교류 협력기관 확대 및 해외레지던시지원 공모 추진(5.24)**

재단은 올해 4개 협력기관(△대만 타이페이 보장암국제예술촌, △스코틀랜드 Cove Parks, △태국 Studio 88 Artist Residency, △독일 SomoS' Artist-in-Residence Program)과 손을 잡고 예술가의 창작역량 강화 및 국외 문화예술교류 활성화를 위해 <레지던시 활성화 사업>의 '[기획형] 해외레지던시지원' 공모를 순차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조선통신사선 13차 향해 추진을 위한 한일 관계기관 업무협약 체결(6.19)**

재단은 6월 17일 오후 3시 쓰시마시청 회의실에서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재현한 조선통신사선의 일본 쓰시마 입항 및 2023 이즈하라항 축제 참가를 위한 관계기관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공동 추진 기관인 한국 측 부산문화재단,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김성배), 일본 측 쓰시마시(시장 히타카츠 나오키), 이즈하라항축제진흥회(회장 하리마 타카노리) 4개 기관이 참가했다.

문화체육관광부

● 2023년 동아시아문화도시 전주, 중국·일본 도시와 문화동행 시작한다(4.25)

2023년 한국의 동아시아문화도시 전주가 중국의 청두시·메이저우시, 일본의 시즈오카현과 문화동행을 시작한다. 그 시작을 알리는 '2023 동아시아문화도시 개막식'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 지원으로 4월 26일(수) 오후 7시,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개최되었다.

● 70년 한미동맹, 문화동맹으로 확장되다 윤 대통령, “문화가 자유 확장의 필수 요건”(4.30)

문체부는 4월 30일(일)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적인 방미 정상외교에서 한미동맹의 한 축으로 '문화동맹'이 뚜렷이 부각된 것을 계기로 관련 정책을 더욱 면밀하게 재점검하고 후속조치를 짜임새있고 신속하게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미 문화동맹 TF'를 구성해 부처 내 역량을 결집한다.

● 미래세대 문화정책 담아 낼 청년 교류의 장 열렸다(5.11)

문체부는 청년의 정책참여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실천을 위해 추진해온 미래 청년세대 중심의 정책패러다임 전환의 성과를 한데 모아 확인하고, 앞으로의 문체부 정책 전반에 미래세대의 감수성을 녹이고자 5월 13일(토)부터 19일(금)까지 '미래세대가 전하는 울

림, 문화로 말하다'라는 주제로 '2023 청년문화주간'을 개최했다.

● 인공지능 시대, 문화예술교육 미래를 논하다(5.19)

문체부는 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원장 박은실)과 함께 5월 19일(금)부터 27일(토)까지 '2023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행사를 개최한다. 2011년 11월 유네스코 총회에서 한국 정부의 제의로 매년 5월 넷째 주를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으로 선포한 이후, 나라별로 주간을 기념해 오고 있다.

● 대한민국,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정부간 위원회 위원국으로 선출(6.9)

문체부는 우리나라가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정부간위원회 위원국으로 선출돼 2023년부터 2027년까지 활동한다고 밝혔다.

● 한일 문화장관 서틀외교 첫걸음, 미래세대 문화교류 확대 논의(6.15)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6월 15일(목) 오전, '한일 문화장관회의'에서 일본 나가오카 케이코 문부과학성 대신과 양국 미래세대 간 문화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카카오와 손잡고 문학창작기금 선정작 브런치스토리에 선보여(4.12)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정병국, 이하 예술위)는 카카오와 협력하여 브런치스토리에 아르고문학창작기금 발표지원 선정작들을 브런치북으로 선보인다. 아르고문학창작기금은 문학분야 작가들을 지원하는 예술위에서 가장 오래된 문학 분야의 대표 지원사업으로, 작가들의 기대와 관심이 매우 높은 사업이다.

● 2023년 문화다양성 주간 행사 '다양한 가치, 다함께 같이' 개최(5.23)

올해 9회째를 맞은 '2023년 문화다양성 주간'이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됐다. 문체부와 예술위는 국적과 인종, 종교, 언어, 지역, 성별, 세대 등 삶의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고,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생각해볼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강원문화재단

• 강원문화재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4.20)

강원문화재단은 도내 장애예술인들의 안정적인 문화예술활동 기회 제공 및 문화예술활동 지속성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강원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지난해 처음 시행된 사업으로 올해는 장애예술인의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위한 '문화예술활동지원'과 신규 장애예술인 발굴 및 역량강화를 위한 '문화예술아카데미'로 추진된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

• 경남도, 영화·영상 활성화 지원사업 본격 추진한다(6.2)

경상남도과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은 도내 영화·영상산업을 육성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경남 영화·영상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본 사업은 지역 영화제 및 영화인 활동 지원을 통해 영화·영상 산업을 활성화 하고 나아가 지역 영상산업의 자생력을 키우고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대전문화재단

•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대구예술발전소 입주예술가 교류전 개최(6.20)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백춘희)이 운영하는 시각예술 레지던시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는 현대미술전시 <확장자>를 6월 22일부터 7월 9일까지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에서 개최한다.

서울문화재단

• 서울문화재단, 청년예술인 대상 창업 교육과정 신설(4.10)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이하 재단)은 청년예술인이 창작자로서의 브랜드 가치와 의미를 탐색해보고 실제 사업 아이디어를 설계해볼 수 있는 <예술플러스창업>의 교육과정 참여자 60명을 4월 11일(화) 오전 9시부터 4월 25일(화)까지 선착순 모집했다.

• 서울문화재단-예술의전당 업무협약 체결... 콘텐츠 교류로 서울시 우수 문화예술 저변 확대(6.12)

재단은 예술의전당(사장 장형준)과 문화예술 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지난 9일 예술의전당에서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서울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증진을 위한 양 기관의 문화예술 자원 교류가 핵심이다.

울산문화재단

• 울산문화재단, 2023년 문화다양성 확산 사업 주관기관 선정(4.13)

울산문화재단은 2023년도 문화다양성 확산 사업 주관기관에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유네스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이행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국의 문화재단 및 문화예술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세종시문화재단

• 세종시문화재단, 2023년 갤러리대관료지원 사업 공모(4.13)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률, 이하 재단)은 2023년 예술인지원 신규사업으로 관내·외 갤러리 대관료 지원사업을 공모했다. 이번 공모는 지역 시각예술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한 관내 갤러리 대관료지원과 지역작가의 대외적 인지도 제고를 위한 관외 갤러리 공간지원 등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 세종시문화재단, 제21회 조치원복숭아축제 부스 운영자 공모(6.15)

재단은 제21회 조치원복숭아축제에 참여할 부스 운영자를 공모했다. 이번 공모는 조치원 복숭아축제 방문객들이 현장에서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를 즐기고, 시민들이 운영진으로 참여하는 등 축제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인천문화재단

• 인천문화재단, 예술인 역량강화 교육 운영(4.7)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이하 인천시)와 (재)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종구, 이하 재단) 인천예술인지원센터는 <2023 예술인 역량 강화 기본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본 교육은 예술인의 안전한 예술창작 환경 조성과 예술인 및 단체의 권리 보호를 위해 마련되었다.

• 인천문화재단, 청년 예술창작 활성화를 위한 입체적 지원사업 <청년창작활성화지원> 추진(5.8)

인천시와 재단이 운영하는 인천청년문화창작소 「시작공간 일부」는 5월 16일부터 6월 1일(목)까지 <청년창작활성화지원> 공모를 진행했다. 본 사업은 '준비단계 지원', '청년창작활동 지원', '자립 지원'으로 구분되며, 청년창작자의 안정적인 예술 현장 진입 및 성장을 목표로 한다.

전남문화재단

• 전남문화재단, 글로벌 지향 전남 특화 문화사업 발굴한다(4.24)

전남문화재단은 도민이 체감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남특화문화사업 발굴을 위해 2차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충북문화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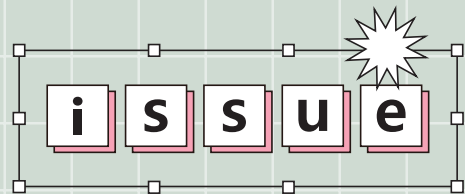
• 충북문화재단·청주상공회의소, 기업·문화예술 상생발전 위한 '메세나 확산' 업무협약(6.13)

충북문화재단과 청주상공회의소는 13일 충북문화재단에서 기업과 문화예술이 상생·발전하기 위한 '메세나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금정문화재단

• 금정문화재단, 부산국제공연예술제 참가작 공모(6.18)

부산 금정문화재단(이사장 김재윤)은 오는 9월 23~25일 금정구 온천천 일원에서 펼쳐지는 2023 부산국제공연예술제에서 공연할 국내·외 거리 예술가와 단체를 다음달 7일까지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부산문화재단
부산문화재단
BUSAN CULTURAL FOUNDATION

문화정책 이슈페이퍼

vol. 21



ISSN 2713-4113

부산문화재단
BUSAN CULTURAL FOUNDATION

발행일 2023. 06. 30. 발행인 이미연 발행처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84-1(감만동) TEL 051-745-7205~8
www.bscf.or.kr 편집위원 김경화 송교성 이지훈 서승우 최시내 편집기획 조정운 원항미 고나령 디자인 제작 올드뉴스
필진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